

ISSUE BRIEF

청소년 with 이주배경

2025. 03.

13호

국내 외국국적 청소년: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과제



〈청소년 with 이주배경〉은
이주배경을 가진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를 모아
발간합니다.

발간번호

MYF25-01-개

이주배경청소년 자원재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복지원법 제18조에 따라 포괄적 범주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관련
최근 이슈, 현장 사례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고자
2021년부터 **청소년 with 이주배경**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with 이주배경」에 담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 혹은 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여는 글

국내 외국국적 청소년: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과제	02
유기옥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1. 이슈 발굴

국내 외국국적 청소년의 법·제도적 지위 현황과 과제	06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법률인권센터 센터장	
지역 이민정책 추진에 따른 이주배경 자녀 정착 과제	12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 교육센터장	
외국국적 청소년의 대학 진학·취업과 정주 지원 과제	18
민숙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포용 과제	24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유한모임 소장	

2. 현장 리뷰

해외 우수 유학생과 함께하는 중등 직업교육의 도전 [Why? & Next!]	32
김미정 경북교육청 장학사	
AI 활용 이주배경학생 수업 방안과 성과	38
이준영 안산원곡초등학교 교사	

국내 외국국적 청소년: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과제

유기욱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 사람, 문화의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죠. 한국은 경제, 문화,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 사회에서도 그 위상을 계속해서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자라나는 외국인가정의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이주해 온 외국인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이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돕고, 미래의 꿈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한국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고, 그 속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는 지금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가정 청소년의 현주소와 문제점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과 사회적 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현재,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한국어조차 낯선 외국인가정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첫걸음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려인 동포들의 가족단위 이주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고려인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고려인 밀집지역에서 살고있고, 지역사회와의 접촉과 교류가 부족하다보니 한국사회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려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고, 조상의 나라인 한국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밖에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도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도 특별한 관심과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법 취지입니다.

외국인가정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받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받으며, 한국 사회에서 자립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으며

모든 청소년은 소중하며,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외국인가정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의 교육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은, 마치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에도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

PART



이슈 발굴

국내 외국국적 청소년의 법·제도적 지위 현황과 과제

이진혜 | 이주민센터친구 법률인권센터 센터장

지역 이민정책 추진에 따른 이주배경 자녀 정책 과제

박민정 |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 교육센터장

외국국적 청소년의 대학 진학·취업과 정주 지원 과제

민숙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포용 과제

석원정 |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

국내 외국국적 청소년의 법·제도적 지위 현황과 과제

이진혜 | 이주민센터·친구 법률인권센터 센터장
한국 내 이주민 대상 법률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교육 및 문화 교류 활동, 이주민과 선주민을 잇는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이주민센터 친구'의 상근변호사로 이주여성, 이주아동, 이주민의 사회보장, 인종차별 등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입니다.
✉ jinhye@chingune.or.kr

I. 국내 외국국적 청소년의 개념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이거나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체류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국내 외국국적 청소년'이라 정의하면, 2023년 기준 현재 국내 외국국적 청소년은 25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법무부, 「2023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2025.02.11, 국적(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참고). 청소년의 범위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아동복지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만 18세 미만)과 구별되며, 특히 성년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청소년으로서 일정한 권리의 주체이자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특성이 있다.

‘국내 외국국적 청소년’의 법률상 지위, 정책 및 제도상의 지위는 독립적이거나 개별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해당 개념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분석을 통해 그 교차점에 해당하는 지점의 법률과 제도를 파악하여야 하는 바, 사람의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우 다양한 논의점들을 모두 살펴보기란 불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외국국적 청소년이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사회적 인간으로서 영위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몇 가지 권리를 중심으로 그 지위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국내 외국국적 청소년이 직면한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II.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지위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즉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에 관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법 제49조),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

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법 제3조 제4호).

국내 외국국적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복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범자의 범위를 ‘국민’으로 제한하지 않고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 및 지원 시책의 마련 및 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주배경청소년에 특유한 지원 외에도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청소년복지시설의 이용, 청소년부모의 지원 등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국적 청소년의 경우에도 청소년복지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며,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III. 국내 체류자격 부여 등 출입국관리법상 지위

1. 만 18세 미만 미성년 외국인의 지위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때에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다(법 제10조). 18세 미만의 미성년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진 성년인 외국인의 자녀로서 가족관계에 따른 체류 자격의 수반 취득 또는 보호자의 체류 자격에 근거한 방문동거 체류 자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학 또는 난민지위 인정 신청 등 취업활동을 제외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체류 목적이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그에 부합하는 체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가족관계에 근거해 받을 수 있는 체류 자격의 종류로는 외교(A-1), 공무(A-2), 협정(A-3) 외에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난민신청자의 국내출생자녀(G-1) 등이 있다. 이러한 체류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있을 것, 해당 부 또는 모가 자녀의 보증인이 될 것 등의 요건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가령 재외동포(F-4)의 자녀가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으로 거주하던 중, 재외동포(F-4)인 부 또는 모가 법 위반으로 인해 강제출국된 경우 해당 자녀는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이더라도 체류 자격 연장이 불가하다. 결국 강제출국된 부 또는 모와 동반하여 출국하여야 한다. 이는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부 또는 모에 의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가 아동학대피해자 등에 대한 특칙규정으로 권리구제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피해자등의 기존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권리구제절차가 끝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없고, 영주권 등 다른 장기 체류자격을 피해자등이 독립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가 가족관계에 근거한 체류자격 외 본인의 체류 목적을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는 대개 일반연수(D-4) 또는 난민신청자(G-1),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의 경우다.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D-4-3)은 자비 부담 전제로 무상교육기관을 제외한 외국인학교 등에 입학하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이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전액 장학생인 경우다. 법무부가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6~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며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에 대하여 일

반연수(D-4) 체류 자격 또는 기타(G-1) 체류 자격을 부여, 학업을 마치고 짧은 기간 요건이 충족되는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년간 약 1,000여 명의 아동·청소년이 이 정책에 근거하여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정책은 곧 마감될 예정이다.

2.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외국인의 지위

가족관계에 근거한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더는 연장할 수 없다. 국민의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 체류 자격을 받은 경우에도, 성년에 이른 후에는 해당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없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자녀로 동반(F-3)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외적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인 경우,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성인이 된 외국인은 별도의 체류 목적과 체류 허가에 필요한 소득, 자산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체류할 수 있다. 가족결합권의 영위는 체류 목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국민의 외국인 부 또는 모 역시, 자녀가 성년에 이른 이후에는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외국국적동포에 한하여 만 24세까지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한 점을 고려할 때, 가족결합 및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 적응 등을 고려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IV. 사회보장적 지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다. 예외적으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하여 수급권자가 된다(법 제5조의2).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자녀를 임신 또는 양육 중이거나 배우자의 한국 국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국적 청소년은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다.

아동보호시설, 그룹홈 등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은 국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해당 시설에서 아동에 대하여 생계 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더라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경우 각 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적인 데다 있더라도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입소를 거부당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에 입소하거나 여러 시설을 전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피부양자 지위 취득 등

국민건강보험은 국내 의료 시스템 접근권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쳐 건강권, 생존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높다. 외국국적 청소년 역시 특정한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입 시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직장가입자라면 입국한 날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건강보험료에도 국민과 외국인은 차이가 있다. 국민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세대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한 세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는 반면, 외국인은 만 19세가 넘으면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2024년 기준 월 150,990원)를 납부해야 한다. 유학생은 50% 경감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야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 대하

여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다음 달부터 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 평등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2023. 9. 26. 선고 2019헌마1165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정부는 특정 체류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완납 시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는 체류 자격에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가지고 있는 F-1, F-3, D-4 등의 체류 자격은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은 여전히 체납 후 다음달이 되면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한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V. 국내 외국국적 청소년의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

1.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부여 방안

2025년 2월 현재 국내 외국국적 청소년에 관한 가장 중대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바로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책의 연장 내지 상시화다. 2025년 3월 31일을 시한으로, 4년의 기간 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들에 대하여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이 정책은 이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도 결정된 바가 없다. 위 정책으로 부모와 형제자매는 체류 자격을 부여 받았음에도 너무 어린 동생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여전히 미등록으로 남아있는 사례, 보호자에 대한 범칙금 부담으로 체류 자격 부여 신청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지위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권 부여는 스스로 선택·결정하지 않은 이 주민이라는 지위로 인해 교육·취업·생존의 영역에서 차별받고 미래를 계획할 수 없게 된 청소년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성년 이후의 삶을 한국에서 당연한 시민의 일원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장치다. 적법한 체류 자격 및 외국인 등록은 국가의 인구통계 및 세금의 징수, 사회보험의 가입자 확보 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통계·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해도, 등록 외국인 숫자 대비 미등록 이주민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2만 명 이상의 이주아동이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시적 구제대책으로서의 체류권 부여 방안의 시행을 연장하거나, 법령에 상시화하여 국내 장기체류 중인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시설보호아동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 자격 부여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외국인의 경우 수급권자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불공정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 국민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거나 양육 중인 경우에 비하여, 한국 국민의 혼인 외 자녀를 단독 양육 중인 외국인인은 한부모가정으로 생계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로 지정되지 못하여 의료, 주거, 생계 등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 국민의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에도 국적 취득 여부를 떠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

으로 판단하여 수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비용 지원이 없다는 현실적 문제로 입소를 기피당하는 외국인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전국단위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자체 예산 책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의 평등한 적용

건강보험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건강하게 살 권리, 생존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다. 외국국적 청소년에게도 이는 예외가 될 수 없다. 건강보험 가입 시기의 제한, 지역보험료 가입자의 세대 구성원에서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자녀가 배제되는 문제, 보험료 체납 시 익월 제한 등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제도가 합리적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자의적인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책 시행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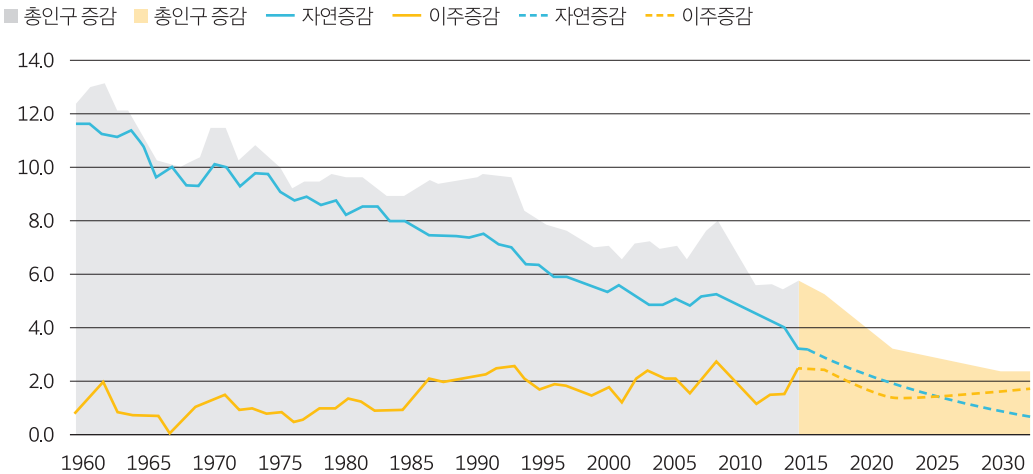
지역 이민정책 추진에 따른 이주배경 자녀 정착 과제

박민정 |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 교육센터장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지역, 사회통합, 교육 관련 연구와 내·외국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입니다. 최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체류권과 교육권 보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mj.park@mtic.or.kr

이민정책 동향과 지역 이민정책

OECD 발표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인구의 자연 증감보다 이민이 인구 규모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의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민에 의한 인구는 1960년 인구 1천 명당 0.8명에서 2030년에는 1.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러한 양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그림 1 참조).

[그림 1] OECD 국가의 인구증가 구성 요소(1960~2030) (단위: 인구 1,000명당)



주: 1960~2012년 자료는 OCED population and Vital Statistics database를 참조, 2013~2030년 자료는 UN Population
김경수 외, 2021,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재인용.

[표1] 연도별 취업 체류 자격과 정주형 체류 자격 외국인 규모(12월 31일 기준)

구분		2011	2015	2019	2021	2023	2024
취업 체류 자격	전문인력(E1~7)	47,774	48,607	46,581	45,143	68,643	85,955
	단순기능인력(E8~10, H2)	547,324	576,522	520,680	361,526	399,938	461,170
	소계	595,098	625,129	567,261	406,669	468,581	547,125
정주형 체류 자격	거주(F2)	138,418	38,881	43,403	42,367	53,056	61,039
	재외동포(F4)	136,702	328,187	459,996	478,442	533,295	553,664
	영주(F5)	64,979	123,255	153,038	168,118	185,213	202,738
	결혼이민(F6)	-	128,879	129,200	134,285	140,161	146,672
	소계	340,099	619,202	785,637	823,212	911,725	964,113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 연도 12월, 통계월보, 재구성

대한민국도 전례없는 인구 감소를 위기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의 전망보다 단축됨에 따라 생산가능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및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는 가속화되고 있다.❶ 특히 1970년 국가주도형 산업특화 전략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비수도권 중소지방도시의 경우는 최근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취약하기 때문에 인구 유출 및 지역 생산성 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는 지역 간의 생산성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면서 지역의 특징점을 살린 장소 기반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장소 기반 정책 중 하나로 ‘이민정책’의 연계성을 논의하였다. 이는 첫째, 이민자는 지역 평균 연령보다 젊은 경향이 있어 고령화를 완화시킬 수 있고, 둘째, 지역의 정책적 수요에 따라 공급 조절이 가능하며, 셋째, 지역의 신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실제 유럽국가들은 신민족주의 발현에 따라 국익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도 동시에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은 강화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이민정책 동향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이민정책의 단계별 유형에 있어서 체류 관리형 노동인력정책 중심에서 2007년을 기점으로 사회통합정책으로 정책적 관점이 변화하였다. 이민인구 면에서도 1980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는 산업연수생제나 고용허가제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나 제도가 신설되면서 비숙련 노동인력의 유입이 확장되었다면,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정주형 이민자는 2024년 12월 현재 96만 4,113명으로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54만 7,1245명)보다 훨씬 많다. 둘째, 중앙정부 중심의 이민정책에서 중앙

정부와 지역정부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소멸 담론과 연동된 국가적 차원의 생산인구 확보

❶ 박민정 외, 2023, 외국인 핵심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국가균형위원회.

전략의 하나의 방편으로 적극적 유입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동향을 종합하면,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주형 이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❶

지역 이민정책 추진에 따른 가족 이민 증가

최근 발표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나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경제적인 관점이 강조되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이민정책이 아닌, 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하여 지역기반 이민정책 체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제시하였고, 이에 맞는 비자제도 구현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나 광역형 비자제도, K-point E74 등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 가능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정책들은 이민자 및 그 가족의 지역사회 정주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들과 어떻게 잘 어울려 살 것인가 하는 통합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즉 기존의 이민정책이 1인 성인기 이민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족이민을 고려한 정책들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❶ 박민정. 2022.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영주-국적 연계 강화 방안. 이민정책연구원.

[표2]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 자격 현황(2024.9.기준)

(단위: 명)

구분	우수 인재 유형				동포가족 유형				
	본인	가족			본인	가족			
	F-2-R	F-1-R	F-3-1R	계(가족)	F-4-R	F-5-6R	F-1-9R	F-3-2R	계(가족)
전체	2,369	289	839	1,128	184	6	4	79	83
경기	82	25	35	60	2	-	-	-	-
경남	250	8	97	105	-	-	-	-	-
경북	441	84	168	252	47	1	1	21	22
대구	53	-	18	18	4	-	-	1	1
부산	156	16	20	36	8	1	-	4	4
전남	209	33	108	141	30	3	-	9	9
전북	591	57	230	287	14	-	-	1	1
충남	288	31	49	80	43	1	3	17	20
충북	261	35	104	139	36	-	-	26	26
강원	36	-	5	5	-	-	-	-	-

자료: 박민정 외. 2024.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현황 및 개선안. 이민정책연구원.

이러한 가족이민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총 19만 3,814명의 이주배경학생 중 69.6%에 해당하는 13만 4,817명이 국내출생이고,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자녀는 각각 1만 1,987명 과 4만 7,01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는 중도입국이나 외국인가정 자녀보다 국내출생의 비중이 큰 편이다. 그렇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족이민 정책으로 외국인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자 기획되었다. 2022년 10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정규사업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89개 중 66개의 지역(74.2%)이 참여하였는데, 이 사업으로 다양한 출신국의 가족이 정주를 목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도 확인되듯이 사업을 시작한지 2년 만에, 우수 인재의 경우 2,369명의 비자발급자의 가족으로 초청된 사람이 총 1,128명이고, 동포가족은 184명의 비자발급자의 가족으로 초청된 사람이 83명이다. 20-30대의 비중이 크고 향후 가족 초청 의향을 조사했을 때 90%가 넘는 사람이 한국에 배우자 및 자녀를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가족이민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❷

이주배경 자녀 정착과 통합을 위한 과제

이러한 가족이민의 증가에 대해 우리 사회는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자녀 정착을 위해서는 유입에 초점을 둔 정책이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과 수반되는 추진과제가 발굴되어야 한다. 몇 가지 기본적인 과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을 위한 인프라 확보 문제다.

지역 이민정책의 동력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의지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이민정책이 논의되면서 자치단체장은 앞다투어 이민자의 적극 유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민인구로 지역 소멸 위험을 막아보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단기 순환이 아닌 정주를 유도하여야 하고, 정주하는 이민자는 가족을 구성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장기적 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족이 정주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을 우선 마련하여야 한다. 즉 이민자는 인력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오는 것이고, 그들

의 배우자와 자녀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3,764명, 2024.9.기준)나 K-point E74(29,526명, 2024.12.기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3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정주를 위해 입국하고 있다.❸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기숙사 생활을 했다면 가족을 위한 기숙사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❷ 박민정 외. 2024.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현황 및 개선안. 이민정책연구원.
❸ 지역특화형 비자는 2024년 9월 기준 F-2-R 2,369명, F-4-R 190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K-point E74는 2024년 12월 기준 2만 9,526명이 체류하고 있다. E-7-4의 경우 사업 추진 전인 2022년 12월 통계를 보면 5,219명의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들은 주택을 구해야 하는데, 한국어나 한국의 주거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나 중개업소는 부재하다. 또한 대체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산단 인근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나 소아과가 인근에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배우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생활 지원을 위한 센터 등의 민간시설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경우 배우자가 6개월 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급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 배우자가 한국어를 배우기는 쉽지 않다.

둘째, 자녀 돌봄의 연계 또한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여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유관 사업을 내놓고 있으나, 이 사업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가 F-3(혹은 F-1) 체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나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배우자는 일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유치원 이하 자녀의 보육료 역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지자체는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자녀의 돌봄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아이들을 방치하여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부모 맞벌이를 통한 지역 생산성 확보는 소원해 보인다.

셋째, 학령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도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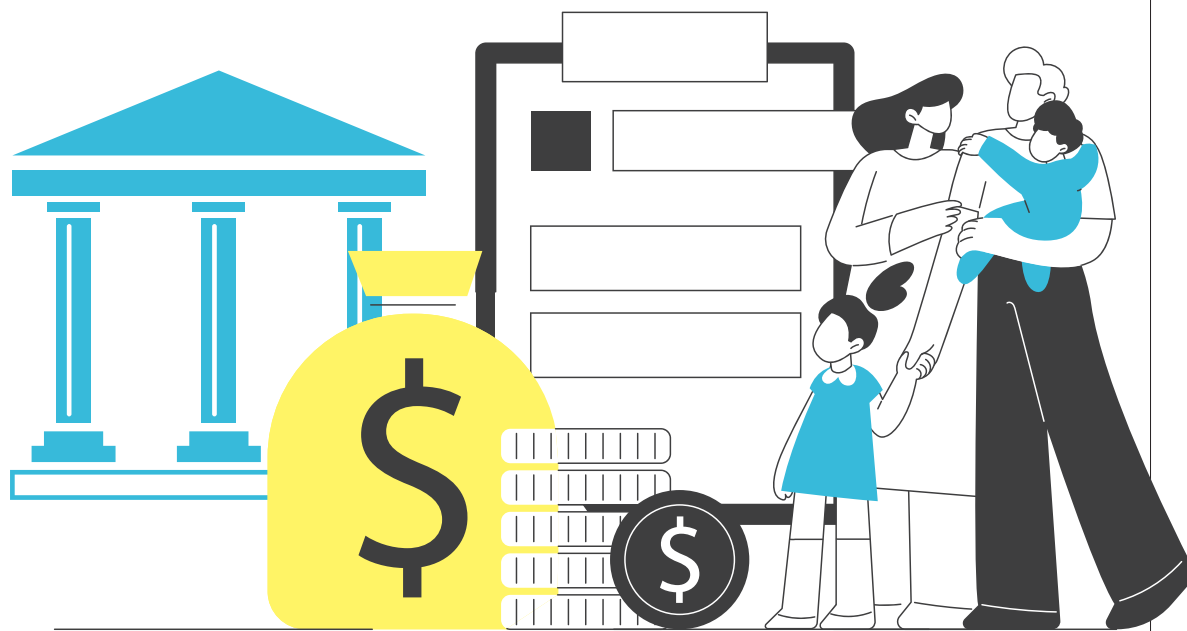
수도권의 경우 이미 중도입국 학생의 증가로 밀집지역 학교는 고심하고 있다. 수도권은 동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어와 러시아어 정도의 이중언어를 지원하는 것으로 많은 부분 해결됨에도 아이들의 학교 입학 지연, 중도 탈락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 증가의 문제는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입국하는 이민자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한 지역에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태국 아이들이 함께 모인 학교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학교 입학 전 한국어교실은 갖추어져 있는가. 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출신국으로 돌아가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보장이 필요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한다면, 이러한 인구문제 대응책으로의 이민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다양한 출신국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넷째, 신규 입국한 가족이민자들의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하게 연계해 주는 지원 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은 있어야 하는데, 가족센터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대상의 서비스를 시도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서비스는 제외된다. 실제 시군 단위에 지원 경험이 있는 공적 기관은 가족센터가 유일하기 때문에, 가족센터의 서비스 대상 확대는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정책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포용과 소통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수행하는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경우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매년 낮아지고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수용성이 낮는데, 현재 정책적으로 많은 이민자를 유입하는 지역들은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은 인구 감소 지역이다. 한국인이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지역은 외국인도 거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비자 혜택이 필요한 이민자의 전략적 선택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들이 정주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고 이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어야만 정착이 가능하다. 해당 지자체나 시민단체는 선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사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만 이민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국적 청소년의 대학 진학·취업과 정주 지원 과제

민속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 교육행정학 박사.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양성, 진로 및 취업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 sookweon.min@krivet.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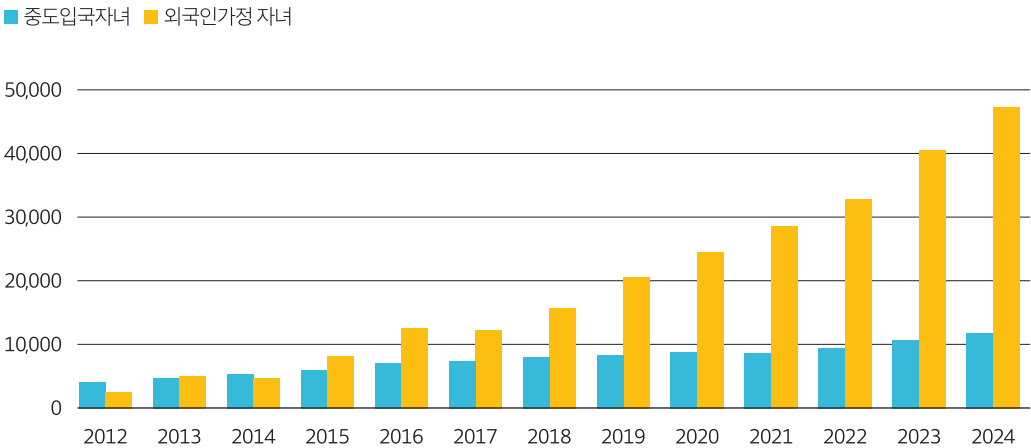
들어가며

최근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의 활력 저하,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지역에서는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외국인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외국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외국국적 청소년 관련 이슈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그간 외국국적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중도입국 자녀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 유학생 등에 대한 관심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림 1]은 2012~2024년 교육기본통계의 초·중·고교의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 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준다(교육부, 2024.8.30.). 지난 12년간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중도입국자녀 수는 약 2.8배의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온 것에 비해, 외국인가정 자녀는 같은 기간 동안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의 외국인 유치가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외국국적 청소년의 유입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도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인구 감소의 우려로 외국인 유치가 활발해지는 현 상황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국적 청소년은 향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지역 주민, 산업 인재 등으로 우선적으로 포용해야 하는 대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인기에 도래하면 국내 체류자격을 자력으로 취득해야 하는 외국국적 청소년에게 있어서 국내에 정주하기 위해 직면하는 현실은 결코 순탄치 않다. 현행 제도상 외국국적 청소년들이 성인

이 된 후 장기 체류가 가능한 취업 비자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해야 하며, 학위 취득 후에는 취업 등의 방법을 통해 체류비자를 연장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개인 차원에서 선택하고 감당해야 하는 영역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 인재를 새롭게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에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과의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국적 청소년들이 체류 기간 연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간에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그들이 사회의 우수 인재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함께 요구된다.

[그림 1] 초·중·고등학교 내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 변화 추이(2012~2024년)



주. 각종학교 포함.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4.8.30.), p.5. <표 5>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대학 진학, 취업의 높은 진입 장벽과 우리 사회의 과제

외국국적 청소년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하고 사회·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진학은 외국국적 청소년에게 있어서 단순한 교육적 의미를 넘어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 경제적 자립의 발판 마련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취업은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로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진학과 취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국적 청소년들은 이 과정에서 높은 진입 장벽에 직면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진로 교육 및 진학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국적 청소년의 대학 진학은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로 및 진학 정보 취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국적 청소년의 국내 대학

진학 전형 선택에는 부모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되며, 국내 교육기관 수학 여부, 한국어 능력 등 다양한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외국국적 청소년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전 교육과정을 해외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외국국적 청소년은 '외국인 특별 전형' 또는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부모 중 한 사람 이상 한국 국적자일 경우 '다문화 전형' 또는 외국국적 청소년의 어학 능력에 따라 '어학 특기자 전형' 등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이처럼 학생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이 처한 환경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 국적 청소년 대상 진학 정보 제공과 진로 지도는 세심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 단계에서도 이들은 체류 비자에 따라서 취업 가능 경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국적 청소년의 상황을 바탕으로 유형화된 맞춤형 지원과 전문성 있는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청소년에게 있어서 언어적 장벽 역시 대학 진학 및 취업 단계에서의 주된 어려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전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외국국적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는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최근에는 입학 시점에 인정되는 언어능력 관련 증빙 자료가 다양화되면서 공인 언어능력 점수에 대한 부담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한국어나 영어에 대한 역량 수준이 높지 않은 많은 외국국적 청소년에게 있어서 대학의 언어 관련 입학 기준은 여전히 진학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은 추후 학위 취득 후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낮은 한국어 능력은 취업 및 정주 단계에서도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 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외국국적 청소년이 한국어 학습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외국국적 청소년은 다양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사회적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인해 학업 및 취업 단계에서 난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국적 청소년이 교육과 취업의 과정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주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는 정보 격차 문제를 줄이고, 다양한 경력 개발을 위한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의 정책 변화와 외국국적 청소년에게 열린 새로운 기회

외국국적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대학 진학과 취업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최근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의 국내 정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2024년 9월 법무부에서는 외국국적 청소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후 구직비자 또는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법무부 보도자료, 2024.9.26.). 비록 2025년 2월 현재 세부 사항이 발표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대학 진학 없이 취업이라는 선택지를 가지기 어려운 현재와 비교해서 향후에는 외국국적 청소년의 상황과 진로 선호에 따라 대학 진학 여부와 취업 시점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직업계고에 진학한 외국국적 청소년이 많은 상황에서 진학 없이 바로 취업으로 가는 경로가 열리게 된다면 그들의 한국 사회 정주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2025년부터 전국에서 실시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하여 지역발전계획과 지역의 외국인력 수요를 고려한 지역 해외인재 유치·양성·취업·정주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유학생 전 주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의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전라북도 역시 해외 우수 인재 원스톱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12.27.). 더불어 지역에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 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의 지원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경상북도에서는 2023년에 외국인 전담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였으며, 지역의 외국인 정책 통합 플랫폼인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유학생의 비자 관련 업무, 상담 등의 행정 지원은 물론 외국인의 지역 정주를 유인하기 위한 취업박람회, 멘토링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 2025).

또한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추세다. 교육부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에게 집중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을 신설하고,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인 K-MOOC를 통해서 한국어 및 한국 이해 강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교육부, 2024). 또한 2025년 2월에 발표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에서 정부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초기 한국어 위탁교육 실시 및 중·고교 한국어 학급 확대, 한국어 진단·보정 시스템 개선,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자료 강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5.2.11.).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국적 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 기회가 현재에 비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최근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고용노동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산학연계 사업을 설계하여 운영 중 또는 운영 예정이다. 외국국적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후 이

러한 산학연계 사업의 참여를 통해 재학 중 일 경험 확대, 직무 능력 향상, 실무 한국어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신규 외국인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 취업 등을 통해 정주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신규 외국인의 정주를 유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국적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체류, 교육, 취업 등에 있어서의 다양한 어려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외국인 정책을 위해서는 단순히 유입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취업, 체류 문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교육부(2024).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교육부 보도자료(2024.8.30.). 202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검색일: 2025.2.1.).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89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20402&opType=N>

교육부 보도자료(2024.12.2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2025년 전국 시행(검색일: 2025.2.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218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교육부 보도자료(2025.2.11.).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검색일: 2025.2.18.).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102552>

민속원(2024).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주 지원 쟁점 분석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법무부 보도자료(2024.9.26.).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검색일 2025. 2. 4.).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14/587927/artdView.do>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2025). 센터 주요 사업 안내(검색일: 2025.2.18.). <https://k-dreamcenter.co.kr/introduce>

3,000여 명 정도로 추산하였고, 2025년 1월 현재 1,131명 정도가 비자를 부여받았다고 한다.^④

그동안 그림자처럼 존재를 드러내기 두려워하였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드디어 청년으로서 우리 사회에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정책의 대상이었던 이주민들과는 다른, 새로운 특성을 지닌 이주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거나 태어난 것과 다른데 긴 시간 동안 체류하면서, 한때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졌을 정도로 한국사회에 잘 적응했고 능숙한 한국어와 한국생활에 익숙한 외국인 청년들이다. 청년이 된 이 아동들은 대부분 한국에 지속적 거주를 희망하는, 그러나 한국정부로부터 장기체류를 보장받지는 못한 처지였다. 그러던 그들의 존재가 공식화, 공개화되고 사회적 존재로 인정되면서 우리 사회는 이들의 정착, 사회적 수용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과제가 제기됐다.

2. 청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데 부족함은 끝이 없더라

늘 그래왔듯이 우리 사회는 새로운 삶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청소년들을 기존의 정책이 허용되는 범위로 수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이들 청소년들에게 부여한 체류 자격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청소년들에게 부여하는 일반연수(D-4) 비자였다.

비자 유지 조건, 청년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혹독하고 비합리적이다

꿈에 그리던 비자를 받고 합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주청년들은, 정책 초기 대학을 진학하는 것 외에는 이 땅에 체류할 방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취직해서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한국정부는, 정기적 비자연장, 체재비 확인을 위한 1천만 원의 은행 잔고(입학시에는 2천만 원의 은행 잔고를 증명해야 한다), 승인받아야 하는 아르바이트, 휴학도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졸업 후에도 제한되는 취업,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비되는 출국 등이 기다리는 또 다른 애 닳는 고난의 길을 제시했다.

본인 이름의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고 뭘 듯이 기뻐하며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다’던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장학금을 받기 위해, 체재비와 등록금을 벌기 위해 ‘미친 듯이’ 법무부가 허용해 준 취업시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고 있다. 미등록이라는 넘을 수 없는 총체적 장벽에 존재를 거부당해 오면서도 한때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성장하고, 돌아갈 모국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드는 게 이상하지 않은 이들 청년들에게, 이 길은 존재에 대한 또 다른 배타성, 거부 혹은 조건부 수용으로 다가오기 십상이다.

그마저도 비자 조건을 채우지 못한 아동(체류 기간이 미달하거나 부모가 대략 1인당 900만 원에 달하는, 일시

④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포용 과제

서원정 |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

2000년부터 이주민 인권활동을 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이주아동의 교육권, 체류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외노협 공동대표, 서울시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등을 역임하면서 이주민 인권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swjpark2015@gmail.com

1. 존재를 드러낸 ‘그림자 아동들’

대한민국의 체류 이주민은,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24년 12월 말 현재 265만여 명^①이다. 이 숫자는 계속 늘어갈 것이며, 향후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는 주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주민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청소년 그리고 고령화된 이주민들과 생활을 같이 하며 동고동락하며 일생을 함께 보내게 될 것이며, 우리의 후세대에는 이주배경의 후손들이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주민의 숫자만이 아니라 그 구성도 다양해져가고, 그에 따라 이주민 관련 법률과 정책도 다양해졌다. 이주민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도 갈수록 많아지고 풍부해졌다. 이제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부족한 노동인력 보안을 넘어 공동체의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로 지대해져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민사회로서 자리매김하고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안들은 이미 낯설지 않다.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는 이민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변화된 정책들을 접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2021. 4. 19, 2022. 1. 20. 법무부는 연이어 ‘국내 불법체류아동 조건부 구제대책’^②을 발표하였다. 일부 그룹의 청소년을 배제한다는 등의 몇 가지 한계점^③이 있기는 하지만 구제대책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발표해온 미등록자 체류 관련 정책 중에서는 가장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구제대책으로 비자를 받을 대상 아동을 대략

① 2024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② 이 구제대책은 2025년 3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주인권단체, 교육계를 비롯하여 많은 뜻있는 이들이 구제대책의 종료에 반대하고 구제대책을 정례화하거나 최소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토론회, 기고 등으로 법무부에 전달하고 촉구하였다. 그에 관해 실태를 파악하고 결정하겠다는 정확하게 방향을 밝히지 않았던 법무부는, 2025년 2월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연장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 글을 쓰는 2월 16일 현재 구체적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

③ 구제대책은 공교육밖의 아동들, 부모가 납부해야 할 과도한 범칙금 부담, 자녀 20세 이후 부모의 출국, 고졸업후 유학비자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점 등의 문제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납부해야 하는 미등록 체류기간 동안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교밖 아동, 이미 청년이 된 아동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스스로 출국하였다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거나,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재입국하거나, 추방당하거나, 성인 미등록 이주민이 되어 이 땅에서 여전히 그늘 속의 위축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

법무부의 구제대책으로 비자를 받은 한 청년은, 번듯한 대학에 진학했고, 몇 개 월간 정말 기뻐했다고 한다.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꾸고. 그런데 점차 알게 되었다. 한국인 학생들의 성장과정이 자신과 달랐다는 것이 현실에서 의미하는 바를. 똑같은 공교육을 받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하는 신기술 신지식 중의 상당한 부분을 한국인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돈과 시간을 들여 보충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나 직업훈련 과정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대학에서의 학업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취업 등에도 필요한 변변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자격증을 찾아보고 찾아보다가 포기하기 일쑤였다.

이제 합법적 사회적 신분을 취득한 이들 청년들에게 자격증 취득, 직업 관련 훈련 과정 등에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진로 상담, 취업 상담 등의 종합적 진로 상담은 필수적이다. 자신의 희망과 직업적 미래와 현재의 생계가 어느 정도라도 매칭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인 청년들이라 해서 위의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창한 한국어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기술을 습득하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이들 청년들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밟아가야 할 ‘비자의 길’을 고려한다면 세심한 상담이 필요하다.

사회적 정착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필요

이주민의 삶은 마치 풀포기를 뿌리만 남겨두고 싹둑 잘라서 옮겨 심는 것과 같다. 낯선 토양, 기후적응에 온 삶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나라에서 가족들이 음으로 양으로 구축해왔던, 사람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하고 존재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한국사회에서 자리잡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 청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존재한다. 부모와 친지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주배경청년들은 그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미등록으로 성장기를 보낸 아동 자신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더욱 취약하다. 그 네트워크는 커다란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을 수밖에 없다. 또래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다양하게 형성하면서 성장하기 어려웠던 이들 청년들에게, 성장하여 자립해야 할 시점에 바라보는 이 사회는 또 다른 낯선 곳이다. 그 낯선 곳에 적절하게

조언과 조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존재는 청년의 단단한 정착에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하겠다.

한국어 학습은 이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기본 학습

장기체류한 이주아동들의 한국어 실력은 대부분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 체류 중인 외국인과 비교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주아동들의 한국어가 한국어 능력시험 최상위급의 실력인 것은 아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말과 글은 달라서 정착을 마음먹는다면 당연히 글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어 수준에 따른 학습 지원은 학교를 졸업한 청년이라 해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국과의 연결 장려 필요

이주아동에게 있어서 모국어는 부모와의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모국과의 연결고리다. 또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 모국어로 소통하면서 보호자로서의 부모의 존재가 빛이 나고, 본국 부모의 네트워크들이 청년의 네트워크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심리적 긍정 효과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많은 이주민 청년들이 성장과정에서 한국 적응을 위해 모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주민 청년이 가진 좋은 자산을 창고 속에 방치해버리는 것과 같다. 의식적으로라도 모국어에 대한 학습은 필요하고, 한국사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들의 모국어 학습에 관심을 갖고 학습반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비자의 안정화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비자의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비자를 받은 그 순간부터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하나하나 부딪치게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 진학이든 취업이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더 높은 장벽을 만나게 된다. 혹은 대학에 진학하고서도 생계비나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이들 가정이 그다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부모 역시 미등록 노동자로서 3D 업종에서 일하였고 저임금, 임금체불, 산재, 질병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험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어렵게 졸업한다 해서 체류가 안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 청년들에게도 힘든 취업의 문고리를 열어야 하는데 전공과 연계되어야 하는 직장을 찾아야 하는 외국인에게는 더더욱 어렵다. 구직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계를 이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들의 생계를 도와줄 부모나 보호자는 청

년이 20세가 되면서부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방 대상이 된다. 취업은 막막한데 부모는 추방 대기 중이고,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자니 언어도 물정도 네트워크도 든든하게 기대기 어려운 본국 귀환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대부분의 이주아동들은 한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본인이 성장해온 유일한 사회적 터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터전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혹독하면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전문인력이 되고,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까지 청년들은 비자발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동분서주해야 한다.

한국이 이민사회를 피할 수 없다면,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이주민들의 유치는 우선 고려사항이다. 그렇다면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회의하게 만드는 현재의 비자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비자를 받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여타의 외국인 유학생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합법화 제도화가 필요하다

미등록 체류자들을 추방으로써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진실이다. 특히 인구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취하기에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는 정례적으로 비자를 부여하는 정규화 정책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인구 부족 국가에서 취하기에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보더라도 당연히 취해야 할 정책이다.

이주아동에게 있어서 체류의 안정은, 아동의 생명권, 교육권, 보육권, 건강권 등 유엔아동권리협약(1991년 11월 20일 대한민국 비준)이 천명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다. 결코 특혜적 조치가 아니다. 체류 안정화를 취하지 않았을 때, 국제사회에서 반인권적 외국인정책으로 비판받게 되는 조치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반차별, 반혐오, 반편견 교육이 필요하다

장기체류 이주아동의 합법화는 그 자체로 한국민들의 인권적 감수성의 고양에 중요한 자극이 될 것이다. ‘불법’, ‘미등록’이라는 어감이 주는 낯설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엄한 존재로서 대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미 한국사회 일각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 차별, 배척의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이주민이 늘어남에 비례해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반차별, 반혐오, 반편견 교육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혐오발언처벌법과 같은 법 규범 제정도 해야 할 것이다.

3.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 기대며 발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이주민과의 공존은 이제 존속의 조건이다.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이주아동들은, 국적이든 피부색이든 체류 자격이 뭐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외국인아동,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도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인’이라는 특징, ‘미등록’이라는 특징을 배제의 근거로 삼기보다 그저 다른 배경을 가진 아동일 뿐이라는 수용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잘 키워내면 이 아동들이,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자리잡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 서로 기대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PART



해외 우수 유학생과 함께하는 중등 직업교육의 도전

[Why? & Next!]

김미정 | 경북교육청 장학사

AI 활용 이주배경학생 수업 방안과 성과

이준영 | 안산원곡초등학교 교사

현장 리뷰

해외 우수 유학생과 함께하는 중등 직업교육의 도전 [Why? & Next!]

김미정 | 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직업교육 담당 장학사로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지역 정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mac0120@gbe.kr

[Why?] 전국 최초 직업계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이주 전환기’를 경험한 국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5% 정도가 외국에서 태어날 정도로,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이입(移入)국이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외국인 유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사안이 되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지역 소재 기업체의 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등학교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정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산업현장은 ‘노동력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국가 산업화를 위한 직업기술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산업 수요에 맞춘 일자리 발굴과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5년 연속 전국 최고 취업률, 전국 기능경기대회 학생부 7연속 우승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숙련 기술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덕분에 2024학년도 고입 전형에서 타 시·도에 비해 경북의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 1,599명 가운데 마이스터고가 190명, 특성화고가 780명으로 경북 교육의 가능성을 믿고 찾아오는 타 시·도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을 유치한 이유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 소멸 가속화로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우리나라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직업계고(전국 최초) 해외 우수 유학생* 선발 현황

지역**	학교명***	선발 현황			
		국가	성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포항	한국해양마이스터고	인도네시아	남	4명	6명
의성	의성유니텍고	태국	남녀	8명	7명
경주	신라공업고	베트남	남	9명	14명
	경주정보고	베트남	남	8명	14명
	경주여자정보고	베트남	여	7명	8명
성주	명인고	베트남	남녀	3명	6명
영주	한국국제조리고	몽골	남녀	3명	6명
	한국철도고	몽골	남녀	4명	8명
합계	8개교	4개국	-	46명	69명(예정)

* 정의: 일정 요건(중위권 이상 성적, TOPIK 1급 이상의 수준)을 갖춘 외국인이 경북의 직업계고등학교에 입학, 졸업 시 TOPIK 4급 이상을 획득하고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학생

** 인구감소지역(성주, 영주, 의성)과 인구감소관심지역

*** 직업계고 졸업생이 담당할 직종의 80%가 미충원인 계열 및 학과 선정

직능수준별 미충원 인원(빈일자리해소방안 관계부처 합동 회의, 2023) (단위: 천 명, %)

구분		1수준	2-1수준	2-2수준	3수준	4수준
	경력	무관	1년 미만	1~2년 미만	2~10년 미만	10년 이상
	자격증	무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학력(보조)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석사	박사
내국인	178(100.0)	42(23.8)	72(40.4)	33(18.4)	29(16.3)	2(1.1)

※ (직능수준별) 경력이 2년 미만(전문대졸 이하)이 14.6만 명으로 82.6%를 차지

※ (지역별) 미충원 인원은 서울·경기(4.8만 명), 경북(1.1만 명), 경남(1.0만 명), 부산·충북·충남(0.9만 명) 순

유학생 유입과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선발된 유학생은 높은 학업성취와 뛰어난 역량을 가진 학생들로, 한국어능력이 부족할 뿐 학습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 및 교육시스템의 차이로 인한 결손을 줄이고자 유학동기 및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분석(이찬주(2024),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의 유입과 정착 방안 연구)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업계고로의 유학 동기로는 한국에서의 유리한 취업 조건과 높은 경제적 소득을 우선 이유로 응답하였고, 일·학습 병행으로 경력 개발을 하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유학생 및 외국인 중학생이 요구하는 교육 내용은 ‘취업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 유학생 27.4%, 외국인 중학생 36.5%로 가장 높았고, 방과 후에 요구하는 교육 내용은 ‘한국어 공부하기’ 유학생 30.3%, 외국인 중학생 28.4%, ‘한국 문화 체험하기’ 유학생 26.9%, 외국인 중학생 29.2%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입-학업-취업-정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단계	내용
유학 전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유학 정책 안내 - 유학 정책과 유학생 선발 등 안내, 홍보 - 국외 유관기관(교육부, 교육청, 정부 부처)과의 MOU 및 업무제휴 체결 - 국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지원 방안 협의 • 유학생 선발 및 입학 전 사회통합교육·학교생활적응교육 실시
유학 중	• 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일반 교육: 국내 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 - 유학생 전용 교육: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등(방과 후 수업 : 방과 후, 방학, 주말 등) • 유학생 한국 유학 적응 지원
유학 후	• 유학생 맞춤형 취업 연계 및 지원 시스템 • 유학생 한국 정착 지원 시스템 구축

단위학교에서는 유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여 진로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	국내·외 학생 간 교류 확대
• 지자체 지원 •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유학생 관리 위원회 구성 • 유학생 관련 인프라 확충 • 한국어학급 환경 구축	• 또래 결연 추진 • 다문화 도서 비치 • 유학생 소식지 발간 • 유학생 게시판 운영 • 유학생 기초학력 향상 도우미 • 유학생 국가 음식의 날 운영
교원 역량 강화	특화 프로그램
• 1대1 결연 • 한국어학급 수업 공개 • 규칙적인 상담과 기록 • 전 교직원 협의회 정례화 • 전 교직원 연수 의무화	• 동아리활동 • 한국 적응교육 • 진로 프로그램 • 포트폴리오 제작 • 정서지원 프로그램 • 문화체험 프로그램 •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미술(풍경화)·음악(관악)·푸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주기적으로 유학생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다국어버전)와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사회적응검사를 실시하여 학업 및 진로관련 교육적 개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면접



입학 전 한국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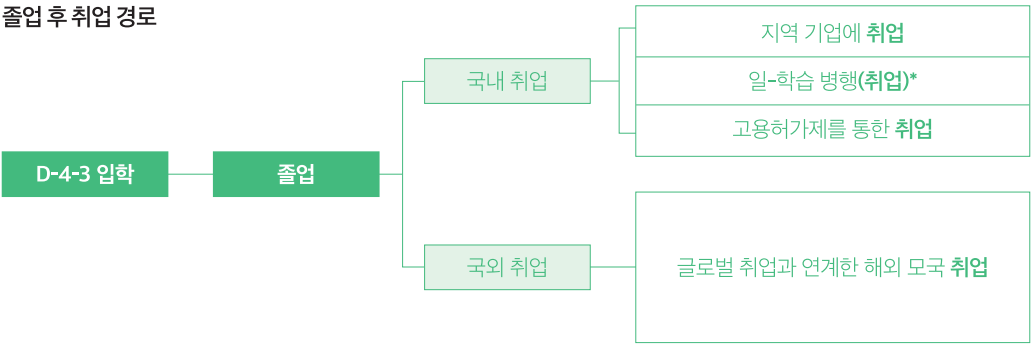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Next!] 유학생 취업 진로 로드맵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이 졸업 후 한국에 정착하는 경로는 취업과 대학 진학 2가지입니다. 유학생 면담조사 결과, 졸업 후 모두 한국의 기업에 취업(창업 포함)하여 정착하는 것을 희망하였으며, 경제적 소득이 생기면 자신의 경력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진로 선택 요구가 높았습니다.

졸업 후 취업 경로



* 일-학습 병행: 기업에 근무하면서 대학에 진학하여 학위 취득 가능

경북교육청 참여·선도기업 대상 설문에서 73.6%의 기업이 직업계고 유학생을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유학생 고용 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인력 확보(구인난 해결)를 위한 비용 절약’이 가장 높게, ‘기존 외국인 근로자(해외 법인 담당자)와 협조 및 소통 비용 절약’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희망 학과로는 기계·자동차(38.7%), 전기·전자(27.2%), 조리·제과제빵(10%)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업에 필요한 취업비자(E계열)나 지역특화비자(F계열) 발급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유학생이 직업계고를 졸업하여 직무 수행능력을 갖추었다더라도 E계열 및 F계열에서 요구하는 학력 기준 또는 취업 직종 범위의 한정 그리고 소득 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비자 발급 기준에서 직무 수행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예: 자격증 취득, 한국어능력 인증 등), 학력 제한 기준은 삭제하거나 별도의 예외 기준을 두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유학생 정책은 단순히 ‘유입’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차원의 인력 양성, 산업 수요 반영, 노동시장 연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유학생은 숙련되고 교육받은 기술·기능 인재로, 생산성 하락과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고등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이주자 역량을 배양한 유학생은 내국인과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조기 유치하여 기술교육을 이수, 산업계로 진출시켜 국가 인재 풀을 다양화한다면, 지역 인프라 및 국가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학생은 잠재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 갈등보다는 장기적으로 국제적 협력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비자·체류 관리 시스템은 이주민이 거의 없던 1960년대 만들어진 틀에 새 비자를 덧대는 방식으로 흘러왔습니다. 대부분료로 37개(A~H), 세세하게 나누면 250여 개에 달합니다. 비자 종류가 복잡해지면서 유학생들은 적합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으며, 출입국 규정과 사증·체류 자격 매뉴얼도 자주 변경돼, 행정적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민정책을 출입국 및 체류관리 보다는 외국인 인재 활용, 인권 및 사회통합에 초점을 두고, 글로벌 기술·기능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



1. 교사(멘토)-유학생(멘티) 결연식
2. 유학생 소식지 발간
3. 유학생 부스 운영



참고자료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계고 포털]: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계고의 모든 정보가 탑재되어 있으며, 유학생 관련 내용은「직업계GO!알GO!」에 소개되어 있음.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특집 다큐] 세계로 뻗어가는 직업교육! 3편 미래를 향하高!

AI 활용 이주배경학생 수업 방안과 성과

이준영 | 인천원곡초등학교 교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사의 한국어 자문위원' 생성형 AI 활용 교육 플랫폼 '누구든AI' 개발자
✉ anthony79@naver.com

이주배경학생이 겪는 학습 곤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이주배경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교과 속 개념어를 이해하고 있을까? 교과 수업은 정해진 내용이나 패턴을 학습하는 한국어 수업과는 달리 광범위한 주제와 개념을 다룬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 준비 단계에서 이주배경학생의 수준이나 언어 능력에 맞게 미리 학습 자료를 재설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군다나 조사학습이나 탐구학습처럼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에서는 목표나 학습 내용이 수업 중에도 변화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미리 모두 준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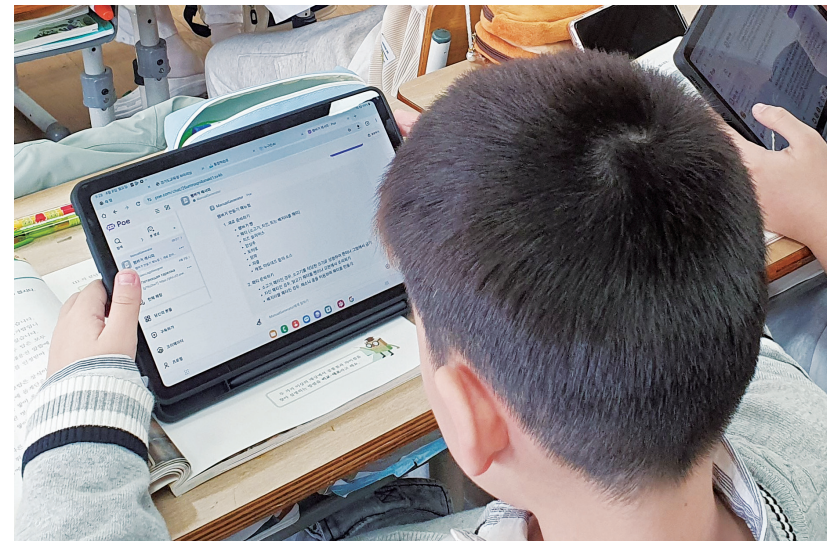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이주배경학생들이 언어적 장벽을 스스로 극복하고 개념어를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학교에서는 이들을 위해 특별학급이나 방과 후 한국어학급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배경학생이 여전히 생활 부적응, 한국어 능력 정체, 교과 학습 결손 등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가까스로 일상 대화가 가능한 한국어 능력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교과 수업에는 거의 따라오지 못하는 이주배경학생이 많다.

인공지능(AI): 문제 해결의 실마리

이주배경학생들의 학습 지원에 AI가 가장 효율적인 도구인 이유는 AI가 언어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학생들에게 적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①는 사용자가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다가 중국어로 답변하더라도

①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텍스트, 이미지, 기타 미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일종의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생성형 AI는 입력 트레이닝 데이터의 패턴과 구조를 학습한 다음 유사 특징이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위키백과)

의미와 맥락이 연결된다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언어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존의 규칙 기반 AI(Rule-based AI)처럼 정해진 답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생각이나 의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여 제공해 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주배경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데 최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AI 튜터^②를 활용해 국어 수업의 학습지원을 받는 이주배경학생의 모습

뒷장의 1번 그림과 같이, 중국어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AI 튜터가 있다면 수업 중 개념어를 설명해야 하는 교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가령, 학생이 “농촌이 뭐야?”라고 물었을 때, AI 튜터는 ‘농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어로 설명하고, 중국어로 작성된 예문을 제공하여 학습을 도와줄 수 있다. 학생이 비록 교과서 속 한국어 설명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AI 튜터가 즉시 학생의 모국어로 개념을 해설해 주므로 이주배경학생이 개념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는 AI의 장점은 이주배경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수업 운영의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아랍어, 일본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들이 한 학급에 함께 있다면, 각 학생에게 수업 활동과 관련된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된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수업 흐름이 방해되어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다국어 동시 번역이 가능한 AI 기술을 활용하면, 자화상을 그리는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상당히 복잡한 내용도

손쉽게 각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물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 AI에게 안내할 내용을 동시에 번역하게 하면 되므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업 상황에서도 원활한 수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② AI 튜터는 AI를 이용해 학생의 학습 상태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의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과 학습 도움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20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I Tutor for CNinKR [Poe](#)

你好! 您是否在理解课堂内容方面遇到困难? 请向我提问, 我会帮助您。

안녕!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 나에게 질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농촌이 뭐야?](#)

AI Tutor for CNinKR [Poe](#) ...

"농촌"是指相对于城市而言的农村地区。在农村地区, 主要以农业生产为主, 人口相对较少, 生活节奏较为宁静。农村地区通常有较多的田地、农作物和农民。在中国的教科书中, "农村"和"农民"是经常出现的概念, 是中国社会结构中重要的组成部分。

以下是与这个概念相关的例句:

1. 农村地区的主要收入来源是农业生产。
2. 农民在农村地区劳作, 种植粮食和蔬菜。
3. 农村地区的基础设施相较于城市要简单。

먼저 얼굴의 기본 형태를 연필로 가볍게 스케치하고, 눈, 코, 입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 두세요. 그런 다음, 그림자의 부분에 음영을 넣어 입체감을 주고, 세부적인 부분을 붓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얼굴의 특징을 강조해 주시고 눈과 입 주변을 더 생생하게 그려주세요.

 Multi-Inputer [Poe](#)

[Chinese] 首先用铅笔轻轻勾勒出脸部的基本轮廓,大致确定眼睛、鼻子和嘴巴的位置。然后在阴影部分添加明暗度,以增加立体感,并仔细地连接各个部分,使之自然协调。最后,如果想到面部特征,可以更清晰地描绘眼睛和嘴巴周围的细节。

[Russian] Сначала легкими штрихами карандаша наметьте основную форму лица, примерно обозначив положение глаз, носа и рта. Затем добавьте тени, чтобы придать объем, и плавно соедините детали, чтобы получилось естественно. Наконец, если хотите подчеркнуть черты лица, больше прорисуйте области вокруг глаз и рта.

[English] First, lightly sketch the basic shape of the face with a pencil, and roughly determine the positions of the eyes, nose, and mouth. Then, add shading to the shadowed areas to give it a sense of volume, and draw the details smoothly to connect them naturally. Finally, if you want to emphasize the features of the face, draw the areas around the eyes and mouth more clearly.

[Arabic] أولاً ارسم الشكل الأساسي للوجه برفق بالريش، وحدد مواقع العينين والأنف والفم بشكل تقريبي. ثم، أضف ظلالاً المناطق المظلمة لخلق إحساساً بالعمق. وأرسم التفاصيل بسلاسة لربطها بشكل طبيعي. وأخيراً، إذا أردت التأكيد على ملامح الوجه، ارسم المناطق المحيطة بالعينين والفم بوضوح أكبر.

[Japanese] まず鉛筆で顔の基本的な形を軽く描き、目、鼻、口の位置を大まかに決めます。次に、影の部分に陰影をつけて立体感を出し、細部をのまらに描いて自然にさせていきます。最後に、顔の特徴を強調したい場合は、目の周りや口元をより詳細に描くことができます。

1. 중국계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AI 튜터
(출처: 누구든AI)
2. 다국어 동시 번역기(출처: 누구든AI)

AI 코스웨어⁹ 또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부진을 찾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이주 배경학생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학습 순서가 다르거나 학습 결손이 누적되어 어디서부터 학습부진이 시작된 것인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잦은데, AI 코스웨어는 학습맵(Learning Map)에 따라 학생의 부진한 부분(개념)을 세밀하게 진단해 주기 때문에 학습부진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으므로 학습부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생성형 AI의 장점은 학습자료를 만들 때에도 두드러진다. 달리(DALL·E)⁹, 미드저니(Midjourney)¹⁰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하면, 저작권 문제 없이 빠른 속도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 대개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특정 단어와 관련된 낱말카드 형태의 학습자료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미지 생성 AI를 통해 자료 개발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실제 사진과 유사한 수준의 시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개념어 학습에서는 유의어나 관련어를 함께 익히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SI를 활용하면 유의어를 수집하고, 이를 학생들의 모국어로 설명한 뒤 패키지화된 학습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SI 기반 단어 학습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유의어 이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 1 코스웨어란 교육과정을 뜻하는 'course'와 'software'의 합성어로 교육 내용과 절차, 방법 등을 포괄하는 교육 목적의 소프트웨어로, AI 코스웨어는 디지털 교과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까지 구현할 수 있음
- 2 오픈AI(OpenAI)에서 개발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 3 미드저니, Inc.에서 만든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진단평가 결과

 합동과 대칭 학습 이전에
2개 개념의 사전 학습이 필요해요.

초등 4학년 2학기
삼각형

초등 4학년 2학기
다각형

단원 학습맵

```

graph TD
    A[합동과 대칭] --> B[초등 4학년 1학기 평면도형의 이동 통과]
    A --> C[초등 4학년 2학기 다각형 부족]
    B --> D[초등 2학년 2학기 규칙 찾기 통과]
    C --> E[초등 4학년 2학기 삼각형 부족]
    C --> F[초등 4학년 2학기 사각형 통과]
    D --> G[초등 4학년 1학기 각도 통과]
    E --> G
  
```

분류하기

분류에 따라서 나누다

классификация : Деление предметов по 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
 分类 : 根据事物的特点划分类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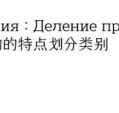
التصنيف: تقسيم الأشياء حسب خصائصها

분류 기준: 색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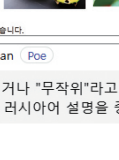
Стандарт: Условия оценки объекта при его классификации.
 标准: 对物体进行分类时的判断条件

المعيار: شروط الحكم على الشيء عند تصنيفه

빨간색 과일



노란색 과일



모든 이미지는 AI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분류하기

분류에 따라서 나누다

классификация : Деление предметов по 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
 分类 : 根据事物的特点划分类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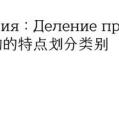
التصنيف: تقسيم الأشياء حسب خصائصها

분류 기준: 색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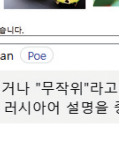
Стандарт: Условия оценки объекта при его классификации.
 标准: 对物体进行分类时的判断条件

المعيار: شروط الحكم على الشيء عند تصنيفه

빨간색 과일



노란색 과일



모든 이미지는 AI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분류하기

분류에 따라서 나누다

классификация : Деление предметов по 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
 分类 : 根据事物的特点划分类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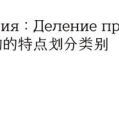
التصنيف: تقسيم الأشياء حسب خصائصها

분류 기준: 색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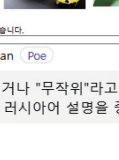
Стандарт: Условия оценки объекта при его классификации.
 标准: 对物体进行分类时的判断条件

المعيار: شروط الحكم على الشيء عند تصنيفه

빨간색 과일



노란색 과일



모든 이미지는 AI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3. 초등 수학(합동과 대칭) 진단 결과(AI 코스웨어 예시)
4. 이주배경학생 대상 수업 자료(출처: Canva AI, 활용 생성)
5. 러시아 단어해설 생성기(출처: 누구든AI)

AI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AI와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모두의 한국어’ 서비스를 출시했다. ‘모두의 한국어’는 표준한국어 교재를 기반으로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며, AI 기반의 말하기, 쓰기 평가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솔루션이다. 이를 통해 학교 수업을 보조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급뿐만 아니라 일반학급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특별학급이 없어 학교에서 별도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모두의 한국어’를 활용하면 별도의 전문적인 훈련이나 교사의 추가적인 노력 없이도 충분히 질 높은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게다가, ‘모두의 한국어’는 한국어 능력이 매우 부족한 학생들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언어를 선택하는 다국어 선택 메뉴까지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언어적인 접근성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모두의 한국어’에서도 AI 기술이 활용되어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신장을 돕고 있다. ‘모두의 한국어’의 AI 대화 기능은 표준한국어 교재를 기반으로 학습한 문법을 연습(Practice)하고 반복(Drilling)할 기회를 제공한다. 마이크를 활용하면 AI와 실제로 대화

⑤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

모두의 한국어 화면
학습 콘텐츠 / AI 기반 자유대화 목록 / AI 대화 장면 / 말하기 학습 장면



하면서 연습이 가능하므로 학생들은 AI 튜터를 말 상대처럼 활용하면서 실생활과 유사한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한 한국어를 활용해 볼 수 있다.

AI 활용 이주배경학생 수업의 효과

AI 튜터는 이주배경학생들에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말 상대가 되어 줄 뿐만 아니라, 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단어를 즉각적으로 설명해 주는 보조 교사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 중 겪는 언어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흥미와 호기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몰입할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교사 역시 이주배경학생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준비 과정에서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은데, AI 기술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더 이상 곤혹스럽지 않게 될 것이다. 🧑🏫

참고자료

- 모두의 한국어(korean.edunet.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How AI could save (not destroy) education | Sal Khan | TED (2023)
- AI 튜터링 기술이 보여주는 한국어 교육의 미래: 모두의 한국어 AI 튜터 (필자의 블로그)

발간번호 MYF25-01-개

펴낸곳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발행일 2025년 3월 10일

발행인 유기옥

편집인 양공현, 최병현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4길 20, 이음빌딩 2층

전화 02-733-7587

팩스 02-733-7586

홈페이지 www.rainbowyouth.or.kr

디자인 및 인쇄 더디앤씨(thednc)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4길 20, 이음빌딩 2층

Tel. 02-733-7587 Fax. 02-733-7586 Homepage. www.rainbowyouth.or.kr